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 집필진
- 김영미 변호사 (사단법인 온울)
 - 김윤진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김재왕 변호사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나동환 변호사 (변호사 나동환 법률사무소)
 - 엄선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임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조미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감 수
- 이소아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원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프로보노 포럼,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봉사활동 수행 및 각 분야별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 및 활동가분들에게 실무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경험이 있는 9인의 변호사님이 모여 집필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파트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조치 청구취지 기재례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부록으로 수록하는 등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실무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을 위해 지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 김재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매뉴얼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활동에 힘써주실 변호사 및 활동가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본 매뉴얼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CONTENTS

| | |
|---------|---|
| 제1장 머릿말 | 1 |
|---------|---|

| | |
|-----------|---|
| 제2장 대표 사례 | 5 |
|-----------|---|

| | |
|-----------------|----|
| 사례 1. 휠체어 좌석 소송 | 7 |
| 사례 2. 시외이동권 소송 | 10 |
| 사례 3. 우체국 차별 소송 | 17 |
| 사례 4. 영화관람권 소송 | 22 |
| 사례 5. 웹 접근권 소송 | 30 |
| 사례 6. 모두의 1층 소송 | 35 |

| | |
|-----------------|----|
|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 43 |
|-----------------|----|

| | |
|------------------------------------|----|
| 1. 장애와 장애인 | 45 |
| 2. 차별행위 | 47 |
| 가. 직접차별 | 48 |
| 나. 간접차별 | 48 |
| 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48 |
| 라. 광고에 의한 차별 | 49 |
| 마. 장애인 관련자 차별과 보조금 및 보조기기 사용 방해 차별 | 49 |
| 바. 그 밖의 차별 | 50 |
| 사. 단서: 정당한 사유 | 50 |

| | |
|------------------|----|
| 3. 차별금지 영역과 권리구제 | 51 |
| 4.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 51 |
| 가. 손해배상 | 51 |
| 나. 입증책임의 배분 | 52 |
| 다. 구제조치 | 53 |

제4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1 : 차별 인정에서의 쟁점 55

| | |
|---|----|
| 1. 입증책임의 배분 | 57 |
| 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원고 입증 | 57 |
|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피고 입증 | 58 |
| 다. 소송 전략 | 58 |
| 2.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59 |
| 가.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 | 59 |
| 나. 입증된 사실에 대하여 장애인과 상대방의 평가가 다른 경우 | 61 |
| 3.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63 |
| 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 | 63 |
| 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 | 69 |
| 다.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분쟁에서의 소송 전략 | 70 |
| 4.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74 |
| 가.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 74 |
| 나.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 75 |
| 다. 차별의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의 차별판단 기준 | 76 |
| 라.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소송 전략 | 77 |

| | |
|--|----|
| 5. 정당한 사유 항변에 대한 대응 | 77 |
| 가. 과도한 부담 주장에 관한 대응 | 79 |
|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관한 대응 | 83 |
| 다. 타인의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 87 |
| 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주장에 관한 대응 | 91 |

제5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2 :

| | |
|------------------|----|
| 손해배상과 구제조치에서의 쟁점 | 95 |
|------------------|----|

| | |
|------------------------------------|-----|
| 1. 손해배상 | 97 |
|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 97 |
| 나.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손해배상의 기능과 필요성 | 98 |
| 다. 손해배상의 상대방: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 99 |
| 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 100 |
| 마.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사례 | 100 |
| 2. 구제조치에서의 쟁점 | 102 |
| 가. 차별행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쟁점 | 102 |
| 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한 쟁점 | 104 |
| 다. 구제조치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및 행사 범위에 대한 쟁점 | 106 |
| 라. 재판권에 대한 쟁점 | 111 |
| 마. 임시조치 신청에서 고려할 점 | 113 |
| 바. 간접강제 청구에서 고려할 점 | 115 |

제6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117

1. 주의할 점과 어려운 점 ----- 119

가. 원고 선정 및 피고 특정 ----- 119

나. 관할 ----- 122

다. 비용부담의 문제 ----- 124

라. 청구취지 ----- 126

마. 청구원인 ----- 127

2. 장애인 사법지원 ----- 128

가.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 128

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 ----- 129

제7장 맺음말 ----- 133

참고문헌 ----- 136

부록 1 구제조치 판결례: 청구취지 및 주문 ----- 137

부록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71

제1장

머릿말

제1장

머릿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이 명제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였습니다. 가장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법원에서도 법대에 걸어 올라갈 수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자의 법관 임용을 거부한 적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서 내에서 유일한 승진 대상자인 장애인을 승진시키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던 비장애인을 부서 이동하여 승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옆에서 이웃으로 살지 못하고 외곽에 떨어진 시설에서 격리된 채 삶을 살아내야 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장애인들이 만연한 차별에 맞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고, 그 결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권단체, 이들을 조력한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이하 ‘장애인 차별구제소송’)도 수십여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인 판단이 담긴 대법원 판례도 3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부족하고, 개별 사건마다 정형화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 보니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변호사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탐험하듯이 새로운 논리를 세우고 부딪쳤습니다.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 소송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딪혀 온 여러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면 새롭게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경험이 있는 몇몇이 모여 부족하지만 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집필진이 선정한 대표 사례 6개의 사건 개요, 쟁점, 주문 및 판결 이유 요약을 실었습니다. 대표 사례를 통해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이 낯선 사람들이 이 소송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 매뉴얼의 핵심인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준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를 면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적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¹⁾을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이 매뉴얼은 변호사가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수행할 때에 활용하기 위한 실무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실무서이므로 매뉴얼을 정독하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이나 같은 내용을 여러 부분에서 반복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매뉴얼을 처음부터 읽는 사람에게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지겨울 수 있지만 양해 바랍니다.

변호사를 독자로 상정하여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장애인 차별을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이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들도 이 매뉴얼을 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매뉴얼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조금이라도 시정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발효되었습니다.

제2장

대표 사례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장애인차별구제소송 6개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장 ~ 제6장에서 이 장의 대표 사례가 언급될 때에는 사례번호와 함께 음영표시를 해두었으니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대표 사례

사례 1. 휠체어 좌석 소송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청구)

1. 사건 개요

- 당사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경기도의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하였는데 휠체어 전용공간의 면적이 좁아 휠체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고 가게 됨.
- 이에 당사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를 상대로 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② 교통약자법상 규정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공간을 버스에 확보할 것을 청구함.

| | |
|------|-----------------------------------|
| 사건번호 | 2018다203418 손해배상(기) ²⁾ |
| 원고 |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
| 피고 | 김포운수 주식회사 |
| 법원 | 대법원 |

2)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6603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 | |
|------------------------|--|
| <p>청구취지 및 항소취지</p>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 <p>[항소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 <p>판결주문</p>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p>[3심 주문]</p> <p>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p> <p>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p> |

2. 쟁점

- 가. 피고에게 교통약자법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지
- 나.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를 하였는지(그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

3. 주문 및 판결 이유 요약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심은 일부 인용함. 대법원의 본 판결은 원심을 일부 인용, 일부 파기함.

- 가. 피고에게 교통약자법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그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통약자법 및 그 시행령 [별표 2], 그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인이 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교통약자용 좌석’의 구체적 내용으로 원고가 청구한 규격의 전용공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길이’는 자동차의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둔 휠체어 전용공간의 길이는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함(원심 인용).
- 나.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격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통일된 견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경기도를 포함하여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정청들이 휠체어 전용공간 규모 기준 미달을 지적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음(원심 파기).

사례 2. 시외이동권 소송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버스를 통한 시외이동권 보장 청구)

1. 사건 개요

- 원고들은 휠체어 사용자 또는 무릎 관절의 장애로 승하차용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장애인, 피고들은 시외버스 및 시외버스 사업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고, 휠체어 탑승설비도 장착되어 있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함.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서울고등법원)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고들의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적극적 조치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함. 원고들과 피고 버스회사들이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함.

| | |
|------|--|
| 사건번호 | 2019다217421 차별구제 ³⁾ |
| 원고 | 휠체어 사용, 무릎 관절의 장애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장애인 |
| 피고 |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
| 법원 | 대법원 |

3)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 A 외 2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이하 ‘시외버스’)과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시내버스 중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가진 저상버스(1층이 저상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2층 저상버스 포함)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이하 ‘저상버스 등’)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며,

다.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 1) 교통약자를 승하차시킬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위 각 유형의 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 2) 휠체어 승강설비를 도입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며,
- 3) 교통약자법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우선적 면허 부여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여부를 고려하라.

2. 원고 A 외 2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 피고 F은 시외버스에,

나. 피고 G는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에,

각 승하차 편의로서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원고 A 외 2인에 대하여는

| | |
|------|---|
| | <p>2016. 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고 D 외 1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항소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외 2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D 외 1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 판결주문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A, B, C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는 시외버스에 관하여, 나. 피고 명성운수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관하여, 원고 A, B, C가 위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원고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 2. 원고 A, B, C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사 에 대한 청구, 위 원고들의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D, E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 C와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D, E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호고속 주식회 사, 명성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한 원고 A, B, C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B, C에게,

- 1) 피고 F 주식회사는 시외버스에 관하여,
- 2) 피고 G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관하여,

원고 A, B, C가 위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

나. 원고 A, B, C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A, B, C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 D, E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3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과 피고 합병 전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쟁점

- 가. 피고 버스회사들과 원고들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존재 여부
- 나.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다. 피고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을 명한 원심판결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 마.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 지원하는 데 미흡했다면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지

3. 주문 및 판결 이유 요약 - 원고들 승소 부분 파기환송

- 가. 원고들이 버스 탑승을 실제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버스회사들과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함.
 -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여 장애인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음.
- 나.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님.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피고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

-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
-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적용되므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
-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 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함.

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시행령에는 승하차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한 규정은 없음.

마.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과 제19조의 각 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함.
-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례 3. 우체국 차별 소송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정신장애인(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금융거래 제한)

1. 사건개요

-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한정후견심판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 18명이 2018년 1월 15일 한정후견심판결정을 통해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금전의 이체·인출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300만 원 이상 금전의 이체·인출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를 받아야 했음.
- 정신장애인들은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예금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우체국 내부지침에 의해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통장 및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를 해야 했고,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더라도 단독으로 거래를 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한 후 마찬가지로 은행창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했음.
- 대한민국(금융위원회)은 2018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피한정후견인 등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후견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관련 규정(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위자료 지급청구를 함.

| | |
|------|--|
| 사건번호 |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⁴⁾ |
| 원고 | 정신장애인(피한정후견인) 18인 |
| 피고 | 피고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 |

4)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합582307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2041059 판결.

| 법원 | 대법원 |
|------|---|
| 청구취지 | <p>1. 피고는 원고들에게,</p> <p>가.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6개월 내에 마련하라.</p> <p>나.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p> <p>다. '후견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관련 규정(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이 사건 판결선고 후 6개월 내에 마련하라.</p> <p>라. 피고 대한민국이 위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하지 않은 행위별로 1일 100,000원을 지급하라.</p> <p>2. 피고 대한민국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신장애인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p> |
| 판결주문 | <p>[1심 주문]</p> <p>1. 피고는 원고들에게,</p> <p>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p> <p>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고,</p> <p>다. 피고가 이행기간 내에 위 가, 나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하지 않은 행위별로 100,000원을 지급하라.</p> <p>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p> <p>[2심 주문]</p> <p>1심 판결 이후 원,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2020년 6월 24일 피고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이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p> |

같음

1.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원,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3심 주문]

2심 판결 이후 피고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만 상고하였고, 상고심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쟁점

가. 100만 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직접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만으로도 단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한 우체국 은행의 조치가 한정후견심판을 통해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같은 법 제37조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원고를 비롯한 피한정후견인(정신장애인)이 우체국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의 적극적 시정조치에 ‘후견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관련 규정(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할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주문 및 판결 이유 요약

가. 1심 판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 차별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한정후견인 보호를 명분으로 전면적으로 비대면거래를 불허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서류 진위여부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한정후견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한정후견인들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거래조치로 인한 차별행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만 이 법원이 한정피후견인인 원고들의 차별시정을 넘어 일반적으로 후견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관련 규정,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구제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심 판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였고, 그 차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비록 이 사건 예금거래 조치가 예금거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는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

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그 취지에 맞게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원고들의 우체국 예금거래와 관련된 차별행위는 상당 부분 시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다. 3심 판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음.

[원심의 위 판단에 더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 중 일부]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사례 4. 영화관람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청구)

1. 사건개요

- 원고1은 전맹 시각장애인, 원고2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원고3은 농인, 원고4는 난청인 청각장애인. 피고1~3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업체들임.
-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길 원함.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자막이 제공되어야 함. 시각·청각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영화를 배리어프리영화라고 함.
- 배리어프리영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함. 첫 번째 방식은 개방형으로 대형 스크린에 자막, 대형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제공되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받는 것임. 두 번째 방식은 폐쇄형으로, 수신기기를 통해 필요한 사람만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이용하는 것임.
- 원고들은 2016년 영화 <사도>가 개봉하였을 때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에서 해당 영화를 관람하려고 표를 구매하였으나, 자막 및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음.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을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함.
- 제1심 원고들 전부 승소, 제2심 일부 승소 후 쌍방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 | |
|------|-----------------------------------|
| 사건번호 | 2018나2001559 차별구제청구 ⁵⁾ |
| 원고 | 원고 1, 2, 3, 4 |

5)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16가합546420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자 2018나2001559 판결, 현재 상고심(2022다203507) 진행 중.

| | |
|------|---|
| 피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2. 롯데쇼핑주식회사 3. 메가박스 주식회사 |
| 법원 | 고등법원 |
| 청구취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김준형, 박승규에게 화면해설을, 원고 오정윤, 함효숙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오정윤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김준형, 박승규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오정윤, 함효숙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 |
| 판결주문 | <p>[1심 주문] 청구취지와 동일</p> <p>[2심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를 원고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1, 2에게는 각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 가)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나,
 - 나) 위 각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화면해설 파일을 전송받아 송출해주는 태블릿 등 수신기와 이어폰을 말한다)를 구비하고 위 각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 파일을 화면해설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 피고들의 각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화면해설을,

2) 원고 3, 4에게는 위 (1)항 기재 각 상영관에서,

- 가)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이나,
 - 나) 위 (1)항 기재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자막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해주는 태블릿, 스마트안경 등의 수신기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거치대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위 1)항 기재 서버에서 자막 파일을 자막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 위 1)항 기재 상영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자막을,
- 각 제공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2. 쟁점

- 가. 피고들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및 그 근거 규정
- 나. 피고들이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제작업체, 배급업체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작하지 않는 상황, 저작권법 저촉 여부,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상 상영관, 상영 횟수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 다. 4명의 원고들의 청구로 법원이 모든 상영관에 편의제공을 명하도록 할 수 있을지
- 라. 법원에 부여된 구제조치의 재량의 의미, 구제조치의 조건(구제조치의 유효적절성, 추상적·구체적 구제조치)
- 마. 정보제공 청구의 성격[금지청구인지 이행청구(장래 이행의 소)인지 여부]

3. 주문 및 판결 이유 요약

가. 1심 판결

- 피고들이 제공하는 영화와 그에 관련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사업자인 피고들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자막을,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간접차별에 해당함.
-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

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에 해당함.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리어 프리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보임.

나. 2심 판결

[배리어프리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의 제공을 구하는 부분 관련]

-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리어프리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제24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충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해 해당하고, 간접차별에도 해당함.

[과도한 부담 관련]

- 개방형 상영방식의 경우,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각 피고들의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초과하여 개방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폐쇄형 상영방식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간접차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위 각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및 서버를 제공하여 각 피고들의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초과하여 폐쇄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상영관의 수신기기 및 서버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웹사이트를 통한 영화 관련 정보,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의 제공 및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구하는 부분 관련]

- 개방형 상영방식의 경우 피고들이 이미 피고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 폐쇄형 상영방식의 경우, 피고들이 향후 이 방식으로 영화를 상영할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피고들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참고〉

| 인용범위 |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⁶⁾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
| 의무 상영횟수 | 특별히 정하지 아니 함 | 총 상영횟수의 3%(토일 포함) |
| 의무 상영관 | 대상 상영관을 제한하지 않음 |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상영관 복합상영관 중 총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 |
| 방법 | 화면해설 및 자막을 제공하 라고 명함 |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의 방법을 구체화함[개방 형 상영방식, 폐쇄형 상영방식(태블릿, 스마트 안 경 등 수신기 선택 가능)] |
| 정보제공청구 | 인용함 | 기각함 |
| 소송비용 | 전부 피고들 부담 | 50% 피고들 부담 |

- 6)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
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김준형, 박승규에게 화면해설을, 원고 오정윤, 함효숙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오정윤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
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김준형, 박승규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오정윤, 함효숙
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

| 이유 | 1심 | 원심 |
|--------------|--|--|
| 차별 판단 |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해당 |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해당 |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 6항 인정, 제24조 제2항 인정 | 제21조 제1, 6항에 근거하여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할 의무 인정, 제24조 제2항은 불인정 폐쇄형 상영을 위한 장비, 기기 등 제공의무는 제21조 제1, 6항 및 제24조 제2항을 모두 인정 |
| 간접차별 |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간접차별로 판단 |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서는 간접차별 인정하지 아니함 |
| 정당한 사유 존부 | 피고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고 판단 | 1)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상영관, 복합상영관 중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2) 총 상영횟수의 3%를 초과하여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함 |
| 정보제공청구 |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조치 명함 |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것이라고 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함 |

사례 5. 웹 접근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2021나2013286, 2021나2013293 판결
(온라인쇼핑몰 웹 접근성 보장 청구)

1. 사건 개요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시각장애인이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는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이에 원고 등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적극적 조치로서 대체 텍스트 제공과 불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함.
- 1심은 손해배상 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금전 지급 부분을 제외한 일부 인용 판결을 확정된 사건임.

| | |
|-------------|--|
| 사건 번호 | 2021나2013279 손해배상(기) 등 ⁷⁾ |
| 원고 | 시각장애인 |
| 피고 | 온라인쇼핑몰 등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p>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

7)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93 판결 같은 날 선고.

| | |
|------|--|
| | <p>2.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내의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각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항소취지]</p> <p>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p> |
| 판결주문 | <p>[1심 주문]</p> <p>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트몰 웹사이트(http://e△△△t.ssg.com) 내의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p> <p>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p>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2심 주문]</p> <p>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p> <p>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p> <p>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

2. 쟁점

-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피고들에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 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 다. 피고들이 위 차별행위로 원고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차별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 (2심에서 특히 쟁점이 됨)
- 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상품에 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의 필요성 여부와 불이행시 간접강제를 하여야 하는지

3. 주문 및 판결 이유 요약

- 가. 이 사건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서 2013.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그 법인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음.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필요한 수단을 구체화하여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2013. 4. 11.부터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적용된다고 규정함.

나.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기각함(2심에서 특히 쟁점이 됨).

- ①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음.
-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고시나 지침에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③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이미지 사용의 빈

도와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협력업체들의 협조 없이 피고들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음.

라.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체 텍스트 제공은 원고 등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피고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로 인하여 웹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므로 법원이 앞서 본 적극적 조치를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피고가 적극적 조치를 일부 불이행함에 따른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움. 이에 따라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주장은 기각함.

사례 6. 모두의 1층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장애인들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 청구)

1. 사건 개요

- 원고 당사자는 뇌병변·지체장애인으로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2명)였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9조), 그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음(7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8조를 통해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의무를 규정함.
-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을 두고 있어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편의점, 카페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제한을 받았고, 아울러 단차가 제거된 장애인용 객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호텔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음.
- 이에 원고들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편의점·카페·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텔신라를 상대로,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명령을 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텔신라와는 강제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에 대하여만 본안소송이 진행됨.

| | |
|------|------------------------------------|
| 사건번호 | 2018가합524424 차별구제청구등 ⁸⁾ |
| 원고 | 휠체어 이용 뇌병변·지체장애인(2명) |

8) 2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024

| | |
|------|---|
| 피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2.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호텔신라(피고 2, 피고 3과는 강제조정 성립)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청구취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원고 1, 원고 2 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고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원고 1, 원고 2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점포설비를 설치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점포설비를 설치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1)항의 편의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면서 20%의 비용을 부담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을 원고 1, 원고 2 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고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원고 1, 원고 2 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점포설비를 설치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점포설비를 설치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1)항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면서 20%의 비용을 부담하고, 3. 피고 주식회사 호텔신라는, 서울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전체 객실의 각 3퍼센트 이상을 원고 1, 원고 2 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하라. |
| 판결주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 |

는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 1)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각 설치하고,
- 2) 만약 1)항 기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편의점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편의점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하여 직원을 통해 편의점 밖에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 위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의 편의점 시설 접근·이용을 위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 2)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의 영업표준에 따른 편의점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고,
- 3) 가맹점사업자들의 위 2)항 기재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하라.

2. 쟁점

-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의한 대상시설의 범위로 한정함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위헌·위법성 여부
- 나.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 접근·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라.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3. 주문 및 판결 이유 요약

- 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예외조항은 ‘장애인등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자유권 행사의 수단이 되는 시설물 이용 등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장애인등의 사회참여 및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음. 또한, 위 시행령이 시설

주들의 개별적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소매점과 음식료품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위 시설들에 대한 접근권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설주들의 비용부담 등 재산권 보호와의 충돌 국면 및 사회·경제적 부담의 조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함.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됨.

- 나. 재화·용역의 제공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를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일반적 차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 시설물 접근·이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유래한 권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이미 모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시설물을 면제하는 기본권의 제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가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어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피고 지에스리테일은 직영 및 가맹 편의점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접근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 다.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 ① 피고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② 가맹점사업자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점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피고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③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를 제거한 출입구(또는 경사로)와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고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비용이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편의시설 설치가 각 편의점의 위치, 구조 등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음.
 - ④ 설사 점포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개별 편의점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등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편의점 내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여 두거나 호출벨 등을 통한 매장 밖에서의 구매보조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안적 조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대안적 조치의 제공이 위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과도한 부담에 따른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위와 같은 사유로 모두 배척되었음.

라. 재판부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의 명령 여부 및 이행가능성과 특정가능성을 모두 갖추어 유효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는 입장 하에,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취지에 담지 않았던 '편의점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하여 직원을 통해 편의점 밖에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 조치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주문과 같은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하였음.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두 6장 53조로 구성되어 있고, 차별행위의 정의,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고, 장애인은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는 크게 두 가지 개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 또는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은 장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거나, 시력을 잃은 상태, 심한 우울증이 있거나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 등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일상 또는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은 쉽게 말해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장애의 범주를 좁히는데,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다소 잃었더라도 살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장애로 평가되지 않게 됩니다.

장애인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를 보면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이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 탓입니다. 그런데 꼭 그럴까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잘 이용하던 청각장애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추가 인증 절차로 ARS 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계좌이체하려면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없는 A는 이제 온라인 뱅킹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A가 온라인 뱅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A가 들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 A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A의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ARS 추가 인증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데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 탓도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를 장애인차별금지법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 또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주변 환경에서 비롯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A의 사례를 볼 때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에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생활’이라는 문구에서 환경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손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회’(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부딪치는 다양한 장벽을 누가 어떻게 제거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사적 주체에게까지 차별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A의 사례에서 보자면 은행은 청각장애인도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증 수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RS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거나 ARS이라면 화면에 있

는 인증 문자를 입력하라는 식입니다. 앞으로 이 매뉴얼에서 다룰 내용은 대부분 장애인이 부딪치는 장벽을 어떻게 제거할지, 즉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2.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6가지 차별행위 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 관련자 차별, 보조견 및 보조기기 사용 방해라고 합니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직접차별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과 같이 장애인에게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차별이 벌어질까 싶지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차별 유형입니다.

나. 간접차별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에게 드러내 놓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장애인에게 불리한 기준을 정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에서 법원은 영화상영업자인 피고가 시각,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충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중등특수교사임용시험 장애인부문 1차 시험에 유일하게 합격하였습니다. 그는 10분 안에 주어진 질문에 구술로 답하는 2차 면접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락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을 인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⁹⁾ 간접차별이 독자적으로 쟁점이 된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에서 함께 주장됩니다. 위 두 사례에서 법원은 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

9) 광주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6누4361 판결.

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제4조 제2항). 사례 ❶ 휠체어 좌석 소송, 사례 ❷ 시외이동권 소송, 사례 ❹ 영화관람권 소송, 사례 ❺ 웹 접근권 소송, 사례 ❻ 모두의 1층 소송 등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입니다. 위 사례들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명시적인 편의제공 요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 인정하였습니다. 직접차별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차별 유형입니다.

라.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해서 홈페이지 게시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놀이공원에 대하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보아 광고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¹⁰⁾

마. 장애인 관련자 차별과 보조건 및 보조기기 사용 방해 차별

장애인관련자 차별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을 한 경우입니다. 청각장애인과 함께 온 수어통역사의 동행을 제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건 및 보조기기 사용 방해 차별은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식당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차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 관련자 차별, 보조견 및 보조기기 사용 방해 차별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바. 그 밖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6가지 차별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괴롭힘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라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자신의 보호를 받던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에 대하여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로 보아 형사 처벌하였습니다.¹¹⁾

사. 단서: 정당한 사유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하여 차별을 하더라도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3항).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188 판결 등.

3. 차별금지 영역과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에서 차별금지라는 제호 아래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등 장애인 가운데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사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부터는 권리구제 수단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권리구제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리구제 수단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실을 조사하여 장애인 차별로 판단한 경우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두 번째 권리구제 수단은 법무부의 시정명령입니다. 만약 권고를 받은 상대방이 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는 차별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43조). 세 번째 권리구제 수단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인데, 이는 다음 항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가. 손해배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46조 제1항).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2항

과 제3항은 재산적 손해 산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데 실제 적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나. 입증책임의 배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차별의 경우에 그 사실은 상대방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한 사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또한 일반 불법행위보다 장애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한 특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피고가 입증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입증할 사실 | 피고가 입증할 사실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차별 상대방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한 사실 2. 간접차별 상대방이 장애인을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 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상대방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 4. 광고에 의한 차별 상대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한 사실 5.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상대방이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행위를 한 사실 6.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 - 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경우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 |

| 원고가 입증할 사실 | 피고가 입증할 사실 |
|--|------------|
| 상대방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제한· 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 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한 사실 | |

다. 구제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제48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구제조치는 미국 민권법 제7편 제706조의 ‘임시적·사전적 구제 청구’와 ‘적극적 조치 명령’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차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차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차별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차별행위를 하면 제지할 수 없었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이행을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구제조치는 사후적인 손해배상보다 효과적으로 차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다양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제4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1 : 차별 인정에서의 쟁점

제4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1 : 차별 인정에서의 쟁점

이 장은 장애인 차별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입증책임의 배분을 살펴보고, 입증 사항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입증책임의 배분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원고 입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는 장애인 차별 관련 분쟁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배분한 규정입니다. 제47조 제1항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한 것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한 민사법상의 일반 원칙과 같습니다.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피고 입증

제47조 제2항은 피해자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등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차별행위의 원인 등이 복잡·다양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고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판례¹²⁾ 역시 같은 태도입니다.

다. 소송 전략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미리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차별에 이르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입증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그 주장을 증명하여야 함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석명을 구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의 막연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였고, 정당한 사유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관을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1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등.

2.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가.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1항은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장애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은 차별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직접차별에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은 상대방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은 경우로 **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에서 우체국이 피한정후견인들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사실이 그러합니다. 이 밖에 정신장애인이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한 경우,¹³⁾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¹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접차별에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은 상대방이 장애인을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에서 영화상영업자인 피고가 시각,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없는 영화만 제공한 사실,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은 시간 동안 구술시험을 본 사실¹⁵⁾ 등이 간접차별의 전제가 된 사실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은 상대방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말합니다. **사례 ① 휠체어 좌석 소송**에서는 버스에 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한 사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1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14)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15) 광주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6누4361 판결.

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에서는 영화상영업자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사례 ⑤ 웹 접근권 소송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에서는 편의점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휠체어 접근 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입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에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은 상대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놀이시설이 특정 놀이기구에 대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를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¹⁶⁾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에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은 상대방이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실을 말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사례는 없는데, 체육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입장은 허용하면서 그와 동행한 활동지원사의 입장을 거부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견 및 보조기기 사용 방해 차별에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은 상대방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실 또는 상대방이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도 아직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상업시설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경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73279 판결.

나. 입증된 사실에 대하여 장애인과 상대방의 평가가 다른 경우

차별행위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입증하였는데, 똑같은 사실을 두고 장애인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증된 사실에 대하여 장애인과 상대방의 평가가 달랐던 사례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는 지상 주차장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 눈·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을 접근·이용하는 데 차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아파트 시공자는 지상 주차장에서 거주 공간까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거주 공간을 접근·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접근·이용함에 있어 제한되거나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상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접근·이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할 때 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눈·비를 맞는 사정은 현재 캐노피 등 아무런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¹⁷⁾

선거방송토론회를 중계하는 방송사는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수어방송 화면을 송출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그 화면이 너무 작아 수어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다며 차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인 방송사는 그 크기가 다소 작을 수는 있으나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며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법원은 관련 법령이 수어통역화면의 크기나 위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가 나름대로 제공하는 수어통역화면이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임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수어통역화면의 크기를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크게 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의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시청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¹⁸⁾

놀이시설에서 어떤 놀이기구에 대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한 정신적 장애인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인 놀이시설은 그 놀이기구 말고 다른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특정 이용객의 경우 특정 놀이기구의 이용 자체가 이 사건 놀이시설 이용계약의 주요 목적이 될 수도 있다며, 놀이시설의 주장과 같이 정량적 혹은 산술적 기준에 따라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¹⁹⁾

(2) 소송 전략

앞서 본 사례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장애인과 상대방의 평가가 다른 경우입니다. 불리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리함이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 다른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법원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법원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례와 선거토론 수어방송 사례에서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놀이시설 사례에서는 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례에서는 시공사에게 지하 주차장까지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카기244 결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한 법령이 없는 점, 선거토론 수어방송 사례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수어통역화면 크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놀이시설 사례에서는 놀이시설 이용계약이 있는 점이 법원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계약 등이 아니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 의무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례나 선거토론 수어방송 사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를 인정하고 차별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에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원의 경향을 고려할 때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외에 다른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

(1)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의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보아 금지합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이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제4조 제2항). 다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제4조 제3항).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각칙의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각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각칙 조항이 구체적인 특칙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해당 각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외의 다른 편의제공을 거부하여도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칙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구체화된 조항으로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²⁰⁾

(표) 정당한 편의제공의 각칙 조항²¹⁾

| | | |
|---------------|-----------------------------------|--|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1조 제1항) -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1조 제3항) |
| | 제2절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금지(제13조 제3항) -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 제1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4조 제3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5조 제3항)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5조 제4항) |
|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금지(제18조 제3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8조 제4항) |

20) 조원희 외 5명,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위법성”, 장애인법연구, 경인문화사 (2016), 315-319쪽 참조.

21) 위의 글, 313-314쪽 참조.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9조 제4항) - 장애인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19조 제7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9조 제8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1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4조 제2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제24조 제4항) |
| | 제4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4조의2 제2항) -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관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6조 제4항)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의 거부 금지(제26조 제5항) - 장애인의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6조 제7항)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7조 제2항) |
| 제3장(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제33조 제3항) |

(3) 법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판시

법원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 1심²²⁾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을 제공받거나, 정책, 절차, 관행 등을 적용받는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으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승·하차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 1심²³⁾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관련 조항의 규정 취지나 형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같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 접근·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위와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같은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규정 취지나 형식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에는 영화 관람을 돕기 위한 시설적 측면의 수단이나 편의뿐만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나 편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 FM 보청기기 등의 수단 및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도 해당한다. 화면해설, FM 보청기기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자, 화면해설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 FM 보청기기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도 해당한다.

③ 장애인 아닌 사람에 대한 영화 관련 정보의 제공은 웹사이트(온라인), 영화상영관(오프라인)을 통틀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에게도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이용가능성과 영화상영관을 통한 접근·이용가능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영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가능성은 웹사이트 내에 텍스트 낭독 기능을 구비하는 등 접근성 지침에 맞춰 제작된 웹사이트의 제공을 통하거나, 영화상영관에서의 시각장애인에게 대한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등의 제공, 청각장애인에게 대한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도 해당한다.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 장비 및 기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도 해당한다.

④ 피고들은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인 원고들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영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화상영관에서 원고들에게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사례 ⑤ 웹 접근권 소송 1심²⁴⁾

피고는 2013. 4. 11.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중략)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 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4) 장애인권리협약의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합리적인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²⁵⁾

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으나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입증책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가 기준이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 ❶ 휠체어 좌석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공간의 면적이 좁아 장애인이 휠체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서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 버스회사²⁶⁾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5) “Reasonable accommodation” mean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교통사업자인 ○○시 및 △△도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버스회사를 지칭함.

다.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분쟁에서의 소송 전략

(1) 상대방의 작위의무 주장

정당한 편의제공은 상대방에게 편의제공을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각칙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으면 편의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칙 조항과 하위 법령, 준용되는 특별법 조항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조항과 총칙 조항, 그 밖에 관련 특별법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대리인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만을 근거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1항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인단의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주장

미리 법률에 모든 경우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대상과 범위, 내용에 대하여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개별적, 사후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받기보다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법령에 없더라도 차별 상황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명시되지 않은 편의제공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재판부가 조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와 같이,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하였는데, 시행령이 다시 그 내용을 다른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의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달리 단순한 물적 편의에 국한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적 편의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았다고 보고, 총칙 조항을 활용하여 인적 편의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받은 하위법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 규정체계와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일 때에는 그에 대한 위헌, 위법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 1심²⁷⁾에서 대리인단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위헌,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령 규정이 비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가 시설물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가 정한 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위 법에 따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은 편의점의 경우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시설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고,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UN장애인인권협약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별표1]의 규정은 대상시설에 대한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 D이 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정한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이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예시적 규정인 이상 모든 시설물의 접근·이용 측면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의 금지를 명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판결]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목적, 규정체계와 취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및 위 권리에서 파생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 생략)

(3)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청구취지 특성의 정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청구를 특정할 때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사건에서 ‘경사로,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라’는 것과 같이 1~3개 정도의 예시를 들면서 ‘등’을 붙여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고가 청구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각각의 방법이 모두 차별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일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오히려 차별시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²⁸⁾ 따라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각각의 방법이 모두 차별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일 경우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함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8) 이상현 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370~372쪽 참조.

4.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드물지만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제47조 제2항). 상대방이 다른 차별 이유를 주장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가 규정한 차별판단의 기준이 쟁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상대방이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장애인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이유로 차별하였거나 고용에서 능력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회사 여건상 해고한 것이다.”라거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업무능력이 결여되어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명시적으로 다른 차별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능력을 이유로 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채용 청각장애인 차별 사례²⁹⁾에서 피진정인은 청각장애인 진정인이 제출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는 것은 진정인이 웹 디자이너로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력이나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피진정인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마땅히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청각 장애인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마자 면접 기회를 곧바로 박탈하였고, 이는 피진정인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 또는 경력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장애 여부를 이유로 진정인을 배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하였습니다.

29) 국가인권위원회 2022.6.2.자 22진정0077200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³⁰⁾에서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서,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로만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서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법원은 고용 차별 사례에서 차별의 원인이 장애가 아니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화성시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사건에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란 점은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³¹⁾

수원고등법원은 여주시가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차별적 질문을 하고 불합격처분을 한 사건에서, “이 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

30) 국가인권위원회 2014.10.21.자 13진정0889400 진정.

3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의 여주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원고와 같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불합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거나,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최초 면접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³²⁾

다. 차별의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의 차별판단 기준

제5조(차별판단)

-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는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차별의 원인이 ‘장애’ 1가지인 경우는 당연히 이 법을 적용하며, 제5조 제1항에 따른 차별판단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³³⁾ 법원이 제5조를 적용한 사례로 아래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피고의 거부행위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³⁴⁾ 대전지방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를 적시하며, “비록 입장거부

32) 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33)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개정판), 나남(2021), 49-50쪽.

34) 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의 원인 중 원고 측과 피고의 말다툼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주된 원인이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 이상, 피고의 입장거부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피고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소송 전략

이상과 같이 상대방은 ‘채용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배제한 것이다’라는 등 차별행위를 하게 된 주된 요인이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다른 사유로 표방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차별행위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을 살펴 차별행위의 주된 원인이 장애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야 합니다.³⁵⁾

5. 정당한 사유 항변에 대한 대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차별행위자에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을 차별하였더라도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47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35)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개정판), 나남(2021), 364쪽.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이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사유는 제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이 자주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① 과도한 부담, ② 현저히 곤란한 사정, 제2호의 ‘특

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가. 과도한 부담 주장에 관한 대응

과도한 부담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로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다섯 가지 경우를 판시하였습니다. 그것은 ① 편의 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게 막대한 비용을 요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② 편의 제공자의 사업이나 다른 참여자들의 관련 활동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로서 해당 편의가 장애유형,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④ 대상 시설 등의 구조변경 또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⑤ 해당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우리나라에는 없고 해외에만 있는 시설이나 설비로서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³⁶⁾

(1) 과도한 부담 관련 사례

거의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사례 ❶ 휠체어 좌석 소송, 사례 ❷ 시외이동권 소송, 사례 ❹ 영화관람권 소송, 사례 ❺ 웹 접근성 소송, 사례 ❻ 모두의 1층 소송 등이 있습니다.

(2) 과도한 부담 주장에 대한 소송 전략

원고는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주장을 위 판례에서 실시한 요건과 면밀히 비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제시하는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

36)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등.

대방의 주장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판례의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관적이고 과장됨을 지적하며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편의제공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에서 원고는 장애인이 영화를 보게 됨으로써 피고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문 예시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단계적·정책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 및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시외버스회사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새로운 차량을 마련할 필요 없이 기존 차량을 개조하여 도입할 수 있다는 점, ② 차량 개조 시 기존 좌석 제거로 인한 손실이 과다하지 않다는 점, ③ 차량 개조를 통한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위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 1심³⁷⁾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영화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로부터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받더라도 오픈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사업자인 피고들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폐쇄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상용화된 장비가 없는 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①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등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영화의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배리어 프리 영화의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유통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영화상영관 좌석 뒤에 화면을 설치하여 자막을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장비나 기기는 영화상영관 별로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스크린 2,281개 중 각 948개, 698개, 452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사업자이므로,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장비나 기기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

2)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

① 위 피고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점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편의점의 경우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를 제거한 출입구(또는 경사로)와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비용이 위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편의시설 설치가 각 편의점의 위치, 구조 등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 ④ 점포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개별 편의점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등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편의점 내에 간편하게 설치가능한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여 두거나 호출벨 등을 통한 매장 밖에서의 구매보조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안적 조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대안적 조치의 제공이 위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사건³⁸⁾

- (3)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예컨대 뒷바퀴가 2개인 형태의 이륜자동차 또는 통상적인 이륜자동차에 보조 바퀴를 부착한 형태의 이륜자동차와 같이 이 사건 [별표 20] 가.의 11.목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이러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38)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전원재판부 결정.

그 예산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당연히 제공하면서 신체장애인에겐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신체장애인 사이에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의 2020년도 총 지출예산 합계 3,063억 4,664만 1,000원(2015년 결산기준으로는 합계 2,537억 8,294만 4,459원)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에 관한 지출예산 합계 284억 4,018만 4,000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게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이 도로교통공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도로교통공단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시험장 중 몇 곳에만 위 차량을 구비하고 있다가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신체장애인이 있는 경우 시험 일시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해당 차량을 응시자의 시험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신체장애인의 기능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예산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관한 대응

(1) 보호 목적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장애인의 신체적 안전이나 금융거래 안전 등을 위함이라는 항변입니다.

(2) 보호 목적 관련 사례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보호 목적의 행위로서 정당한지 쟁점이 된 사례로 **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사건³⁹⁾,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⁴⁰⁾, 뇌병변장애인 여행 상품 판매 거부 사건⁴¹⁾ 등이 있습니다.

우체국 차별 소송에서, 1심은 원고가 피한정후견인이더라도 100만 원 미만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 행위능력자인데도 피고가 피한정후견인 보호를 명분으로 전면적으로 원고의 비대면 거래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비대면 거래 제한이 차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놀이기구 탑승이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하여 탑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건⁴²⁾ 재결⁴³⁾에서 차별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사건의 경우 ① 비교대상의 특정, 비교기준의 설정, ② 차별취급의 존재 확인, ③ 차별취급의 정당화 가능성, 비교대상, 비교기준, 차별적 취급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차이의 정도가 차별취급 차이의 정도에 비례하는지, 공익적 목적이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차별취급이 공익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차별피해와 공익 사이의 형량에서 공익이 더 중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다 덜 침해적인 다른 취급은 없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⁴⁴⁾ 그러면서 “이 사건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에 있어서 사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매534733(조정 성립으로 2019. 10. 11. 확정)

42) 국가인권위원회 21진재0001900 결정.

43) 행심 제2020-159호 기각결정 취소의 심판청구, 이재희, “장애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201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71쪽 참조.

44) 이재희, “장애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201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71쪽.

실관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및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조수석 착석을 금지한다면 이는 추상적 위협에 대하여 과도한 금지를 가하는 행위로서 비례성을 결여하였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보호 목적 주장에 대한 소송 전략

상대방의 보호 목적 주장에 대하여, 대리인로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편견에 기반한 후견적 접근이라거나, 당사자의 권리의 침해 정도가 과도하고, 설령 보호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4) 판결문 예시

사례 ㉓ 우체국 차별 소송 1심⁴⁵⁾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예금거래 조치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 차별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한정후견인 보호를 명분으로 전면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불허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서류 진위여부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의 일부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한정후견인들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예금거래 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우려하는 금융사고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3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예금거래 조치로 인한 차별행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⁴⁶⁾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기기구의 경우 그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상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지적장애인인 원고 A, D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높다거나, 이 사건 유기기구의 작동방식이 원고 A, D에게 특별히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전에도 원고 A 등은 7년 동안, 원고 D 등은 4년 동안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유기기구는 신장 110cm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에도 보호자의 동반 하에 그 탑승이 가능한데, 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원고 A, D가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다고 하여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유기기구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쉽게 해제할 수 있는 수동 안전벨트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 D가 보호자와 함께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함으로써 그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 거부조치가 원고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타인의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인(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대방의 차별행위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항변으로 다투어집니다.

(1) 타인의 권리 침해 관련 사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타인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쟁점이 된 사례로 사례 ❶ 휠체어 좌석 소송, 사례 ❸ 우체국 차별 소송,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⁴⁷⁾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⁴⁸⁾ 발달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차별 사건⁴⁹⁾ 등이 있습니다.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 2062769 판결.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49) 국가인권위원회 21진재0001900 결정.

사례 ❶ 휠체어 좌석 소송에서 교통사업자인 피고는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교통약자법이 규정하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좌석을 축소해야 하므로 그만큼 다른 승객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례 ❸ 우체국 차별 소송에서 피고는 중증 정신장애인이자 피한정후견인인 원고들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행위가 원고들과 거래하는 상대방 등의 금융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거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에서 놀이공원 사업자인 피고는 놀이기구가 멈추거나 비상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시각장애인은 대피가 어렵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느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탑승객의 대피가 늦어져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타인의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소송 전략

법원은 위 사례에서 타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원고는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편의제공 등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평등조치이자 상대방의 의무로써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큰 반면 그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 정도가 크지 아니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타인 권리 침해 주장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분리·배제하지 않고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임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3) 판결문 예시

사례 ❶ 휠체어 좌석 소송 1심⁵⁰⁾

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단계적·정책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 및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위 한국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좌석을 제거하는 경우에 일반버스의 경우 매립형 리프트 및 노출형 리프트는 2인승 좌석 3개(총 6개의 좌석)를 제거하여 2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하고, 우등버스의 경우 매립형 리프트는 1인승 좌석 2개(총 2개의 좌석)를, 노출형 리프트는 1인승 좌석 4개(총 4개의 좌석)를 제거하면 2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바, 휠체어 승강설비를 일부 도입하는 경우에 우등버스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면 탑승 승객수의 변화가 크지 아니하고, 일반 버스는 평소 버스의 승객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탈착형 또는 접이식 좌석의 설치로 휠체어석 및 일반좌석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여지도 있으므로 기존 좌석 제거로 인한 손실이 과다하지 아니한 점 (...)

사례 ❸ 우체국 차별 소송 1심⁵¹⁾

(...) ④ 피고가 우려하는 금융사고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3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예금거래 조치로 인한 차별행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⁵²⁾

2) 그 밖에도 피고는 (...),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이용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법규가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이용에 있어 노출되는 위험정도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이용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도 존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이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그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들 역시 이유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사건⁵³⁾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보조석 탑승 제한은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인 점, ②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고, 이 진정 사건 피해자의 행위를 발달장애인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③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53) 국가인권위원회 21진재000190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발달장애인 차별-행심 제2020-159호 재결 취지에 따른 결정.

피진정인이 탑승 조건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보호격벽 설치 및 보조석 차량문 잠금 설정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점, ⑤ 피진정인이 제출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예시·내용은 보조석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모두 안전운행에 위협이 된다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점, ⑥ 보조석에서 발달장애인이 도전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이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피진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보면, 피진정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은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주장에 관한 대응

(1)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진정직업적격)에 대한 대응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는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제4조 제3항 제2호).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장애가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⁵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4) 미국 민권법상 진정직업자격이란 종교, 성별, 또는 출생국적이 특정 사업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인종과 피부색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진정직업자격 인정 요건은 (성별의 경우) ① 전체적으로 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특정 성이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② 특정 성을 배타적으로 고용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지, ③ 성차별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 등입니다(피용호, “민권법상 성차별 고용행위와 진정직업자격(BFOQ)의 인정범위”, 노동법논총 제15집(2009. 4.), 59쪽 참조.).

(가) 진정직업자격 관련 사례

진정직업자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로 대학 교직원 직권면직 및 보직 배제 사건⁵⁵⁾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들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전에 담당하던 업무는 제반 행정사항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는 업무로서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고 후에도 원고가 같은 업무를 충분히 수행 가능하므로 피고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진정직업자격 주장에 대한 소송 전략

이 경우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원고는 진정직업자격은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정당한 사유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상대방이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필요한 노동능력, 그리고 당사자의 능력이 어떠한 점에서 부족한지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용 거부나 해고처럼 고용 자체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업무 분배나 조정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고려하여야 함을 밝히고, 상대방이 그러하지 아니 하고 만연히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 판결문 예시

대학 교직원 직권면직 및 보직 배제 사건⁵⁶⁾

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1) 부당해고 관련

위 인정사실 나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5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2599 판결.

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2599 판결.

처분 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장애만을 해고의 사유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원고가 사고 전에 담당하던 업무는 기숙사의 제반 행정사항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는 업무로서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고 후 상태로도 같은 업무를 충분히 수행가능하다고 보이며, ③ 설령 원고가 장애로 인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1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시설과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업무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고려해 보지도 아니한 채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오로지 원고가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1항 1호의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 46조 1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2) 보직 임면 대상자 제외 관련

(...) 다음으로 원고의 건강상태로는 학사지원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의 전제가 되는 학사지원처장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그에 필요한 노동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 밖의 주장에 대한 대응

진정직업적격 외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사례로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소송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선거업무의 특수성상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보조인 동반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보조인 제도의 취지, 보조인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를 주장하는 등 선거업무 및 원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제5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2 : 손해배상과 구제조치에서의 쟁점

제5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쟁점 2 : 손해배상과 구제조치에서의 쟁점

1. 손해배상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과 관련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46조(손해배상)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개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과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의 전취지를 통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⁵⁷⁾을 두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손해배상의 기능과 필요성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차별 피해자인 장애인은 차별을 시정하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로 만족할 수도 있고, 차별로 인해 입은 손해까지 배상받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당사자의 요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소송진행 중 이 부분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은 소장 제출 단계부터 차별구제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심은 차별구제 인용과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우체국)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우체국은 거래제한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피한정후견인(정신장애인)에 대한 거래제한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만 남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우체국의 거래제한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차별구제와 병합하여 진행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의 거래제한

57) 2016. 3. 29. 민사소송법에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임을 확인받지 못하고 소송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탑승거부 사건⁵⁸⁾에서도 1심 선고 전 성남시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면서도 장애인 차별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를 통해 성남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 제도 아래에서 어떤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를 확인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장애인 차별행위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일 수도 있기에 실제로 피해가 크지 않고 손해배상액수가 미미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의 상대방: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일부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⁵⁹⁾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이지 ‘차별행위를 한 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① 법률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행위를 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습니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차별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일 뿐, 의무자를 축소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차별행위를 한 자’로만 축소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등 차별행위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지만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58)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 소송 제1심).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09024 판결(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 소송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합42897 판결(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받을 권리 보장 소송 제1심).

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에서 차별 피해 당사자들은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우체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우체국이 차별을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인당 2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우체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 사건에서도 5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행위에 따른 위자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 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일부를 차별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 액수를 정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은 공익소송이므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마.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사례

(1) 장애인 차별행위는 맞지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된 사례

사례 ① 휠체어 좌석 소송에서 교통사업자인 피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그에 따라 장애인 차별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규격(휠체어 전용공간)의 명확히 통일된 견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피고가 휠체어 전용공간 규모기준 미달을 지적당한 바도 없기에 위자료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⑤ 웹 접근권 소송에서 항소심⁶⁰⁾은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시행령에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을 웹 접근성 보장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기업인 피고들로서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법령과 고시·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협력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행위를 한 피고들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법령 해석이 위법하지만, 관련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된 사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 사건 1심에서, 원고가 교통약자에 해당함에도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고를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⁶¹⁾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60)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2021나2013286, 2021나2013293 판결.

61)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장애인차별금지 등 판결.

2. 구제조치에서의 쟁점

가. 차별행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쟁점

(1)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의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차별행위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로 제시합니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차별행위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제4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제2장의 각 규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교통약자법상 지도·감독 의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각종 지원·교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차별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의 의무를 차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책임이 무거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오히려 면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시설접근권, 정보접근권 등의 보장은 국가의 역할 없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행위를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금지합니다.⁶²⁾ 이 법은 사인의 경우 단계적 이행을 통해 의무이행시기를 유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법원의 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나 원청회사 등의 감독 의무를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지 않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큼니다.

(3) 차별행위 적용 범위 쟁점에 대한 소송 전략

지금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구제조치를 청구할 때 원고는 어떠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되는지 청구원인에서 밝혀야 합니다. 영 소송전략상 애매할 때에는 여러 차별행위 유형을 중첩적으로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국가 등에 대한 구제조치 청구를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 등이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닌 때에는 대법원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정청에 대해 차별구제의 영역에서 의무이행 판결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차별구제의 필요성이 중대하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장애인법령(교통약자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이 부여한 국가 등의 의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의무불이행이 사실상 차별행위와 다름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2) 제8조, 제8조의2,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4항 및 제5항,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등 다수의 조문들이 특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한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는 차별행위의 영역과 수단 등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공공기관” “정보통신”, “문화·예술활동”,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한편, 제2장(제10조 내지 제32조)은 개별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내용을 규정합니다. 특히, 개별적 영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제11조 제3항).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통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별표에서 열거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은 사례 2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례 4에서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 접근·이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점, (중략)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편의제공 대상이 됨을 밝힌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에서의 대법원 판단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 열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저상버스의 도입, 장애인콜택시의 탑승 배제 등 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영역이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부당합니다. 즉, 입법부가 미처 법률로써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공백을 마치 처음부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례 4와 6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예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한 소송 전략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원고는 주장하려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률의 시행령까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으로 해석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차별행위 수단이 하나의 법조항에만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차별행위의 유형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확인한 뒤 저촉되는 모든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대상자가 탑승을 부당하게 거부당하

였다고 봄시다. 이는 먼저 제4조 제1항 1호의 직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어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의 조항을 따라가 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콜택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15조 재화, 제26조 행정서비스 이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9조가 준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행위의 영역 및 수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조항에 저촉됨을 밝힘으로써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해당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⁶³⁾

다. 구제조치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및 행사 범위에 대한 쟁점

(1) 법령 및 쟁점이 되는 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게 차별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② 만약 그러하다면 이때 재량권은 원고의 청구 목적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기속될 필요 없이 원고가 청구한 목적을 고려해서 적절한 차별구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63)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은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행정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에 차별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사례 ① 휠체어 좌석 소송 항소심⁶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 하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달리 적극적 조치의 내용, 형식,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문언의 해석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차별구제조치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명령 여부와 그 내용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차별구제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것 외에, 차별구제조치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비례성 등에 관한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5인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5개 역사에 각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사건의 1심 판결⁶⁵⁾의 “피해자의 적극적 조치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시정을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 명령이 차별행위의 중단·시정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는 없는지 등(비례원칙)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한 뒤 적극적 조치 명령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면 된다.”라는 판시를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필요성, 비례성의 요건을 적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강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장애

64)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나2024388판결.

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05669 판결.

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⁶⁶⁾

이처럼 법원은 차별구제조치 명령을 내릴 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요건(필요성, 비례성)까지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불법을 수용하는 재량권의 행사라고 비판하면서,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적극적인 차별시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이 차별구제조치를 명령할 때 원고 청구에의 기속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위 지하철승강기 설치 차별구제청구소송 사건 항소심에서 “제48조 제2항은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 하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였고, 달리 적극적 조치의 내용, 형식,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문언의 해석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구속됨 없이 차별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⁶⁷⁾

즉, 법원은 원고의 청구의 목적 범위 및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차별시정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차별구제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 사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한 피고 주식회사 GS리테일

66) 서울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2029929 판결.

67) 서울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2029929 판결.

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 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각 설치하라.’고 명하는 것 외에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만약 1)항 기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편의점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편의점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하여 직원을 통해 편의점 밖에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 구제조치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및 행사 범위에 대한 소송 전략

(가) 청구취지 구체화의 정도

법원은 차별구제조치의 내용을 정할 때에, 청구의 목적 범위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확장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구제조치 이행의 실효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차별구제청구의 목적 달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 판단에 익숙한 보통의 재판부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극적 구제조치는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특별한 뜻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청구취지를 벗어나 차별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포함하여 적극적 구제조치를 내리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과의 충분히 소통하여 차별 지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청구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행위 시정방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청구취지를 구체화하되 다소 개방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 제기 시 청구취지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하나의 예시로써 제시하고, 재판부가 이를 더 구체화하도록 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원고가 차별구제조치를 다양화하고, 차별행위 시정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유용한 전략일 것입니다.

(나) 차별해소의 보편성을 갖도록 청구취지를 구성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여 차별구제조치를 명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대상 노선을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한정하여, 그 노선 범위 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를 비롯한 피한정후견인(정신장애인)이 우체국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차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차별행위자인 우체국에 대하여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 외에, ‘후견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관련 규정(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려는 차별구제조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소송 당사자와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필요는 있으나, 기존 법원의 태도에 매몰되어 차별구제조치의 효과가 그 당사자에게만 미치도록 협소하게 청구취지를 구성함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별구제조치가 유사한 차별을 겪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 때 차별구제소송이 갖는 공익적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한 영역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보편적인 매뉴얼’의 마련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하여, 장애인의 투표 참여에 필요한 접근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를 한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투표소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한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⁶⁸⁾.

68) “Disabled in Action v. Board of Elections in City of New York”(2014), 법원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사건번호: No. 12-4412-cv., 원고: Disabled in Action, 피고: Board of Elections in the City of New York, 판결선고일: 2014. 5. 14.

(다) 화해권고 또는 조정절차의 활용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청구취지 범위를 벗어난 차별구제조치의 내용을 판결로써 내리는 데에는 부담감을 느끼는 반면, 화해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차별시정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실례로,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 관련 임시조치 사건⁶⁹⁾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담아 세밀하게 적극적 구제조치에 대한 조정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법무부 모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여 화해 또는 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나 조정 절차에서 차별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재판권에 대한 쟁점

(1)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별 시정의 내용은 대부분 차별행위를 중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권을 발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법령상 의무가 없고,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행정권을 발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청구가 입법에 관한 문제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애인의 청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인에게 모두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률을 들며, 그 법령에서 규정

69) 서울고등법원 2021. 12. 7.자 2021라20729 결정.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소송 전략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다른 법률이나 동등한 지위의 법률이므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상대방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로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해석하여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음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조항의 규정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입법자가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법자의 의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법률 해석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될 수 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제한된 조문으로부터 다양한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문으로부터 설명 의무, 안전보장 의무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도출해 왔습니다. 법률 해석은 법원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부터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가 충분히 도출됨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할 때에는 헌법정향적 해석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헌법합치적으로 하여야 하고, 나아가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 중에서도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의미를 채택하는 헌법정향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정향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마. 임시조치 신청에서 고려할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은 적극적 조치 청구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임시조치 신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임시조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신청의 장점

임시조치 신청의 장점은 ① 본안에 비해 심문기일과 결정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어 소송경제상 유리한 점, ② 본안소송의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배정되어 사실상 판단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점, ③ 구술심리를 중시하여 서면 작성의 부담이 적은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본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임시조치 신청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

임시조치 신청으로 본안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형보다 길게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치료감호소는 소송대비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들을 급히 출소시킨 적도 있습니다. 선거 관련 소송으로,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보조인 동반을 허용해달라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6. 8. 28. 실시 예정인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과 관련하여,
 - 가. 1교시 언어이해, 2교시 추리논증 영역에서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보장하고, 숫자답안지 작성을 대행할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 나. 3교시 논술영역에서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보장하고, 그 시간 동안 타자를 치는 것을 대행할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2.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다만, 본안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외에도 정신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강제한 규정에 대해, 이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도 있습니다.⁷⁰⁾

(3) 임시조치 신청에서의 소송 전략

임시조치 신청서는 본안소송 소장의 내용을 축약하면 됩니다. 통상의 목차는 당사자의 지위, 피신청인의 장애인 차별행위, 임시조치의 필요성(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가 애매한 경우 ‘~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기재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임시조치 신청과 유사한 “가처분”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3.자 2023카합21154 결정.

임시조치 신청은 법 문언대로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우선 차별행위를 중지시킨 다음에 본안판단을 받도록 함이 법의 취지입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존재가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차별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일정한 작위 의무의 부과라는 적극적 조치를 임시적으로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⁷¹⁾ 한편, 심문기일에서 구두변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별피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차별행위를 소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바. 간접강제 청구에서 고려할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구제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과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⁷²⁾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⁷³⁾에서 간접강제를 인용하였습니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15.자 2018카합20049 결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 2062769 판결.

(1) 간접강제 청구의 장점

간접강제는 청구취지가 분명히 특정될 때에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조치 판결을 받고 집행법원에서 따로 판결을 받기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구제조치가 인용된 뒤에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집행 절차를 개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2)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소송 전략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시정 조치의 재량을 부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의 특정과 집행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특정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아직 확립된 판례 없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시정 조치를 취할 재량을 인정할지는 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청구취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을 때 청구취지에 간접강제를 포함하려면 집행가능성 쟁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간접강제는 집행을 전제하기 때문에 재판부나 상대방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특정 정도에 따라 청구취지에 간접강제를 포함할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집행가능성이 쟁점이 되지 않을 때는 간접강제를 청구취지에 포함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경우는 청구취지에 간접강제를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조치 집행은 아직 사례가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6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6장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주의할 점과 어려운 점

주로 소 제기 전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소송비용이나 임시조치 신청 여부, 간접강제 청구 여부 등은 소송 계속 중에도 계속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 원고 선정 및 피고 특정

(1) 원고 선정

① 특정 장애 유형만 원고가 될 수도 있지만 ② 소송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장애유형을 아우를 수도 있고, ③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함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①번 유형은 차별을 겪고 있는 해당 장애인과 같은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원고로 한 사례 ⑤ 웹접근권 소송, 지적장애인을 원고로 한 놀이공원 차별구제 소송,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원고로 한 지하철 엘리베이터 차별구제소송 등이 있었습니다.

②번 유형은 다양한 장애유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은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원고를 대리한 소송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난청인 사람과 농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맹과 저시력 장애인으로 나누어 원고를 선정하였습니다.

③번 유형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관련자들이 원

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를 “장애인 관련자”라고 지칭하고, 위 관련자에 대하여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을 하는 경우 또한 이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5호). 청각장애인과 함께 온 수어통역사의 동행을 제한한다면, 청각장애인과 함께 수어통역사도 차별구제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차별이 비단 장애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비장애인까지 원고로 포함하여 문제제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넓게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유아차를 동반한 어머니를 모두 원고로 하여 건물의 접근성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노인, 유아차를 동반한 어머니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을 적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여러 명인 경우 설령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원고 수대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법원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⁷⁴⁾

원고들을 여러 명으로 제기할 경우 원고들이 가진 장애의 특성과 원고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서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74)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2) 피고 특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수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국가기관이 실제 차별행위를 하였더라도 민사소송이므로 법인격이 있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의 경우 제1심에서는 피고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를 포함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들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및 제14조는 차별금지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수범자를 교육책임자(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로 정하고 있고,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6호). 이러한 경우에 의무의 수범자인 교육기관의 장을 소송의 피고로 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의 이름을 특정하여 피고로 하고, 해당 교육기관이 국립기관이라면 대한민국을, 공립기관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함께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이 피고인 경우에는 기업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에서는 편의점 운영기업이 직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우와 가맹점을 둔 경우를 나누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의 법률상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법의 규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적극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가 될 수 있는 수범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수범자가 여러 명일 때는 수범자 모두에게 청구할지 실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범자가 애매하다면 여러 명의 수범자를 모두 피고로 하되, 피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 관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권이 민사법원에 있는지, 행정법원에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소송에서 계속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에서부터 관할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의 제1심과 제2심 판결에서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⁷⁵⁾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 1심⁷⁶⁾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미국 장애인법상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강제명령(injunction)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강제명령도 명령의 대상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분하지 아니하는 점,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44조 제1항에서 이러한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에 반하여, 위 제48조 제2항의 규정은 공·사법 관계, 계약 유무, 인격권 등의 존재 유무에 관계 없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반해, 그러한 점을 보완하고, 차별적 행위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통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 소송을 민사소송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의지로 해석되는 점,

75) 대법원에서는 관할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④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전배상에 대한 원칙의 예외로서 적당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는 민법 제764조와 유사하게 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성질을 갖는 점, ⑤ 위 제48조 제2항에서 소송의 성질 및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차별행위의 주체나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르게 분류한다면 분쟁 해결의 절차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제4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해당 법률관계의 성질과 무관하게 민사 법원에 차별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 2심⁷⁷⁾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략) 원고 A 외 2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하는 구제조치는,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금전배상만으로는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등을 위한 구제조치를 명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완하는 구제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고, 구제방법의 내용에 따라 소송의 형태나 그 절차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반 공·사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개인, 사법인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도 위와 같은 차별금지 규정의 수범자로 정하고 있다.

77)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중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이나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구제조치 청구의 상대방이 행정주체라거나 그 대상이 행정청의 행정계획이나 시책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권의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다. 비용부담의 문제

(1) 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

차별구제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할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위 규칙 제23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 제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사건에 대해서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때문에 공익사건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의안번호 2115830, 2115832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참고).

(2) 소송비용 감면 주장

소송대리인은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 후반부에 소송비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차별구제소송의 경우 항소심 선고 전에 공익성을 강조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하였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도 함께 강조할 수 있습니다.

평등 및 비차별(제5조)

11.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a)~(c) (생략)

(d)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부담.

1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2018)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0.2 및 10.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b) (생략)

(c)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

(d) 생략

라.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설정

아직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기재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적극적 조치를 법원의 재량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는데,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인용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필요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청구취지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작성해야 할지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5장 2. 다. (4) 구체조치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및 행사 범위에 대한 소송 전략을 참고 하되, 검토 중인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장애인에 대한 일회적인 차별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유사 차별 사례가 있었거나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인지, 상대방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공공기관이나 정부인지 등에 따라 시정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2장 대표 사례의 청구취지와 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접강제 추가 여부

소제기 전에 청구취지를 구성할 때 간접강제를 추가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의무가 도래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범자가 전혀 이행 의지가 없을 때, 일정 기한 내에 준비 기간이 끝나면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에도 피고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규정상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할 수 있으므로' 차별구제 소송에서 구하는 내용(청구취지)이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지⁷⁸⁾ 판단이 필요합니다.

78)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설비·기능 또는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즉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의 의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채무 또는 부부간에 동거를 할 것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과 같은 인격존중에 반하는 채무 등은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황진구, 주석 민사집행법(Ⅵ)(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02~103쪽 참조].

마. 청구원인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에는 근거 법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 장애인권리협약도 적극적으로 원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협약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법원 역시 국가기관으로 수범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고도 협약을 근거법규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급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으로만 원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보조인력 동반을 요청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재판부는 국내 법률이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⁷⁹⁾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제3항 제3호는 ‘유권자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위 협약에 의하여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위 협약도 선거에 관한 비밀 선거 등의 선거원칙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주요 조문들에 대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의미를 풀 어쓴 일반논평을 발간하고 있고,⁸⁰⁾ 2022년에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 발표되었습니다.⁸¹⁾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

79) 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합42897 판결.

80) 현재까지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 9조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 (2014),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3호 (2016),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16), 자립 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17),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2018), 협약 이행 과 모니터링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7호(2018)이 공식 발표되었고,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이 지난 2021. 3. 공개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된 일반 논평의 국문번역본과 영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 논평(2020)에 담겨 있습니다.

81) <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 (2023. 12. 5.)

공식 번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 연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공동번역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thekdf.org/index.php?mid=UN_CRPD&document_srl=1659 (2023. 12. 5.)

과 가이드라인⁸²⁾이 발간되었습니다. 관련 쟁점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당사자는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법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당사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법원 행정처는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0년 이를 수정하여 전국 법원 재판부에 배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당사자에 맞춘 개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보조기와 보조인력의 활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고령자와 같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재판부에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지원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가이드라인과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청 사항으로 활동(이동) 보조인력, 의사소통 보조인력,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및 기구, 확대경(확대 독서기),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낭독 프로그램 이용 가능 전자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보청기 또는 음성증폭기, 수어통역, 문자통역, 휠체어, 점자판결문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 사항들은 예시로 그 밖에 필요한 지

82) <https://www.ohchr.org/en/special-procedures/sr-disability/international-principles-and-guidelines-access-justice-persons-disabilities> (2023. 12. 5.)

원을 빈 칸에 직접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물적 여건에 따라 신청 사항이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체로 법원은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부와 협의하면 적절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

(1) 장애인의 욕구 파악

사건 당사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유형의 장애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잔존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필요한 사법지원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말할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보여주고 신청서의 신청 사항 중에 필요한 것을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신청서의 신청 사항 가운데 마땅한 것이 없다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빈 칸에 적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은 따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알립니다.

사람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지만 장애 종류에 따라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장애 종류별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휠체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

지체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경사로, 승강기 등 물리적 접근성입니다. 대부분 법원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으나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휠체어 사용자가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사전에 재판부에 휠체어 접근성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법원에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변 주차장을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3) 언어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

언어장애인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언어장애인보다는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을 만날 일이 더 많습니다. 언어장애인과 소통할 때는 못 알아들었을 때 몇 번이라도 솔직히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인 중에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장애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는 미리 재판부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사람과 함께 출석한다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수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수어, 필담, 말 등으로 의사소통합니다.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이라면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지 물어봅니다. 그에 맞추어 법원에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음성증폭기 등을 제공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제공한 사례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함께 신청합니다.

수어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수어로 통역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어통역사가 시간을 가지고 통역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이 말하게 되면 수어통역사가 통역하기 어렵습니다.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정에 출석한 소송 관계자들이 천천히 말하고 동시에 말하지 않도록 재판장에게 소송지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문자통역은 속기사의 속

기 화면을 법정의 대형 화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속기사의 글씨 크기가 당사자가 볼 수 있는 만큼 큰지, 글씨 위치가 화면 아래쪽이어서 다른 물체에 가리지 않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글씨 크기를 조정하고, 글씨가 가급적 화면 위쪽에 자리하도록 소송지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

시각장애인은 파일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점자, 큰 문자, 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가 있고, txt 파일로 변환될 수 있는 파일만 있으면 그 보조기기에서 그 파일 내용을 점자, 큰 문자, 음성으로 변환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txt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파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규칙 등에서 전자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부탁하여 파일을 구해 봅니다.

한편 법원은 판결문이나 기일 통지서를 점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이용하여 점자 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대리하도록 합니다. 점자 판결문은 신청 후 제작까지 2주 내지 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치

지적·자폐성장장애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는 의사소통 보조인력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보조인력은 통상 장애인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여 진술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법정에 같이 가서 그가 장애인 옆에서 지지해 주면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장애인들도 좀 더 편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사법기관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⁸³⁾ 사법기관 및 그 소속원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로 ‘보조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⁸⁴⁾ 장애인이 당사자이고 직접 진술하기 어려울 때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에 따라 진술보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는 진술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이 진술을 증개할 수 있습니다.⁸⁵⁾

진술보조인과 같은 조력자가 있는 경우라도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이 소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가능한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023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알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 당사자는 청각장애인이었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법률용어는 비법률가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기 쉬운 표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필요합니다. 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8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8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 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85)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맺음말

제7장

맺음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다양한 해석 가운데 장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해석이 기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매뉴얼은 가급적 다양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사례로 보이려고 하였습니다만, 모든 사례를 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 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매뉴얼이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법원 행정처,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가이드라인(개정판) (202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 OHCHR,

<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 (2022. 9. 9.).

이상현 외 공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서울 지방변호사회 제5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이재희, “장애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201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조원희 외 공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위법성”, 장애인법연구, 경인문화사 (2016).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개정판), 나남 (2021).

한국장애포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국문 번역), https://thekdf.org/index.php?mid=UN_CRPD&document_srl=1659 (2022. 10. 21.).

황진구, 주석 민사집행법(VI)(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부록 1

구제조치 판결례:
청구취지 및 주문

[부록 1] 구제조치 판결례: 청구취지 및 주문

| | |
|------|--|
| 번호 | 1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2599 판결 차별구제 |
| 청구취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를 법인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
| 주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1.부터 2014. 7. 3.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를 법인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 3.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번호 | 2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6850 판결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8.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주위적으로, 대출거래 약정 시 모든 장애인에게 자필서명과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내부지침의 기재를 삭제하고, 예비적으로, 위 내부 지침의 기재를 대출거래 약정 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후견인 선임 없이도 활동보조인 등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필서명이 가능케 하도록 수정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장애 |

| | |
|----|---|
| | <p>인식 개선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라.</p> <p>3.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항소취지]</p> <p>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이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p> <p>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8.14.부터 2019.4.5.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3. 대출거래 약정 시 모든 장애인에게 자필서명과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내부지침의 기재를 대출거래 약정 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후견인 선임 없이도 활동보조인 등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필 서명이 가능케 하도록 수정하라.</p> <p>4.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일부 청구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본다.)</p> |
| 주문 | <p>[1심 주문]</p> <p>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p>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2심 주문]</p> <p>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p>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

| | |
|------|---|
| 번호 | 3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58467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 |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버스 운행 도중 긴급용무 시 잠깐 가까운 휴게소에 세워달라는 수신호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라. |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
|------|---|
| 번호 | 4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차별구제청구 |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상주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연결된 승강기를 설치하라. |
| 주문 | 1. 원고의 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
|------|---|
| 번호 | 5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합42897 판결 차별구제 등 |
| 청구취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이하 ‘향후 선거 등’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보조인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대 매뉴얼 및 장애 감수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3.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주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
|----------------|--|
| 번호 | 6 |
| 사건번호 | <p>사례 ② 시외이동권 소송</p> <p>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p>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A 외 2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시외버스운송사업(이하 ‘시외버스’라 한다)과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시내버스 중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가진 저상버스(1층이 저상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2층 저상버스 포함)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이하 ‘저상버스 등’라 한다)를 단 |

계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며,

다.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 1) 교통약자를 승하차시킬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위 각 유형의 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 2) 휠체어 승강설비를 도입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며,
- 3) 교통약자법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우선적 면허 부여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여부를 고려하라.

2. 원고 A 외 2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 피고 F은 시외버스에,

나. 피고 G는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에,

각 승하차 편의로서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원고 A 외 2인에 대하여는 2016. 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고 D 외 1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외 2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D 외 1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금호고속, 명성운수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외 2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1심 주문]

1. 원고 A, B, C에게,
 - 가. 피고 F 주식회사는 시외버스에 관하여,
 - 나. 피고 G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관하여, 원고 A, B, C가 위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원고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
2. 원고 A, B, C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대한 청구, 위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D, E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
C와 피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D, E과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2심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 1)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는 시외버스에 관하여,
 - 2) 피고 명성운수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위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
 -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4, 원고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위

| | |
|--|---|
| | <p>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p> <p>나. 원고 4, 원고 5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p> <p>[3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과 피고 합병 전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번호 | 7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p>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4,500,000원, 원고 F, E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중 일부 기재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라는 판결을 구함.</p> <p>[항소취지]</p> <p>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에서 패소한 공동원고 A, B, C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p> |

주문

[1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 가.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더블락스핀’ 항목의 “갑작스런 회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 손과 다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재 중 “하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부분을 삭제하라.
 - 나.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롤링 엑스 트레인’ 항목의 “360도 회전과 빠른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양 손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허리와 등, 목을 지지할 수 있는 힘과 적절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재 중 “과 적절한 시력” 부분을 삭제하라.
 - 다.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렛츠 트위스트’ 항목의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회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 손과 다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허리와 등, 목을 지지할 수 있는 힘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재 중 “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 부분을 삭제하라.
 - 라.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챔피언 쉽 로데오’ 항목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과 빠른 회전으로 인해 양 손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재 중 “하며, 적절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부분을 삭제하라.
 - 마.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2면 ‘범퍼카’ 항목의 “범퍼카 탑승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손과 다리, 적절한 시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기재를 “범퍼카 탑승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손과 다리, 운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수정하라.
 - 바.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5면 ‘티익스프레스(T-EXPRESS)’

항목의 “급경사와 급회전 코스의 빠른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양 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허리와 등, 목을 지지할 수 있는 힘과 적절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재 중 “과 적절한 시력” 부분을 삭제하라.

사.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20면 ‘더블락스핀’, ‘렛츠 트 위스트’, ‘롤링 엑스 트레인’ ‘챔피언 쉽 로데오’, ‘허리케인’, ‘범 퍼카’, ‘티익스프레스(T-EXPRESS)’ 각 항목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의미하는 기호를 모두 삭제하라.

3.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 A, B, C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D, E, F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 북’에 대한 변경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하 며, 원고 A,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감정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고, 원고 D, E,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감정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심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는,
 - 1) L ‘M’ 8면 ‘N’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2) L ‘M’ 8면 ‘O’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3) L ‘M’ 8면 ‘P’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4) L ‘M’ 8면 ‘Q’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5) L ‘M’ 9면 ‘R’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6) L ‘M’ 11면 ‘S’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7) L ‘M’ 14면 ‘T’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 8) L ‘M’ 18면 어트랙션 탑승 기준표 내 ‘N’, ‘O’, ‘P’, ‘Q’, ‘R’, ‘S’, ‘T’의 각 ‘장애유형별 탑승가능 어트랙션’ 중 ‘시각장애’ 각 항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 9) L ‘M’ 4면 탑승자 안전기준 중 “4. 시각적 위험인지 능력. 빠른 속도, 회전, 충격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인지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인지능력이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트랙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 | |
|--|---|
| | <p>기재를 “4. 시각적 장애와 관련한 안내. 빠른 속도, 회전, 충돌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 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수정하라.</p> <p>다.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p> <p>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감정비용 제외)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p> <p>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
|--|---|

| | |
|----------------|--|
| 번호 | 8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3나61901 판결 차별구제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판결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p>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교섭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장애인 또는 약물 복용 중 이라는 이유로 상품설명, 가입권유, 보험내역설계 등 청약의 유인행위를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p> <p>2. 피고는 위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금액, 월 보험료,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하라.</p> <p>3.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p> |

4. 만일 피고가 위 판결 선고일부터 10일의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 시까지 원고에게 1일당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교섭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장애인 또는 약물 복용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설명, 가입권유, 보험내역설계 등 청약의 유인행위를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위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금액, 월 보험료,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5. 만일 피고가 위 판결 선고일부터 10일의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청약서 양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원고에게 1일당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1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1.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 | |
|--|--|
| | <p>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p> <p>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p>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2심 주문]</p> <p>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p> <p>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청약의 유인행위 중지 금지, 청약의 유인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p> <p>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31.부터 2016.4.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p> <p>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p> <p>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p> |
|--|--|

| | |
|----------------|--|
| 번호 | 9 |
| 사건번호 | <p>사례 ① 휠체어 좌석 소송</p> <p>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p> <p>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p> <p>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6603 판결</p>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p>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p> <p>2. 피고는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p> <p>[항소취지]</p> <p>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p> |

| | |
|------|--|
| | 2.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주문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p>[3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 번호 | 10 |
| 사건번호 | <p>사례 ④ 영화관람권 소송</p> <p>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p> |

| | |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원고 3, 원고 4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3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3,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p>[항소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주문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원고 3, 원고 4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3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3,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심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를 원고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1) 원고 1, 원고 2에게는 각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가)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나,

(나) 위 각 상영관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화면해설 파일을 전송받아 송출해주는 태블릿 등 수신기와 이어폰을 말한다)를 구비하고 위 각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 파일을 화면해설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의 각 총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화면해설을,

(2) 원고 3, 원고 4에게는 위 (1)항 기재 각 상영관에서,

(가)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이나,

(나) 위 (1)항 기재 상영관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서버에서 영화의 자막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해주는 태블릿, 스마트안경 등의 수신기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거치대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위(1)항 기재 서버에서 자막 파일을 자막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 | |
|--|--|
| | <p>위 (1)항 기재 사영횡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다)만큼 자막을, 각 제공하라.</p> <p>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p>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p> |
|--|--|

| | |
|----------------|--|
| 번호 | 11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2029929 판결 차별구제청구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05669 판결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위치에 [별지2] 기재 기준에 따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별지3] 기재 위치에 [별지4] 기재 기준에 따른 통로를 설치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기재 위치에 [별지6] 기재 기준에 따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3. 피고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1156-1 철도용지 1,421m² 및 같은 동 1151-1 철도용지 중 [별지 7] 도면 표시 ‘가’부분 토지 지하에 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하여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으면 원고들에게 [별지8] 기재 위치에 [별지4] 기재 기준에 따른 통로 및 [별지6] 기재 기준에 따른 엘리베이터를 각 설치하라. 4.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9] 기재 위치에 [별지6] 기재 기준에 따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p>[항소취지]</p> <p>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통로의 설치를 구하는 청구는 제외).</p> |

| | |
|-------------|---|
| 주문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번호 | 12 |
| 사건번호 | <p>사례 ③ 우체국 차별 소송</p> <p>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20410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p>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30일 합산 1,000,000원 이상 3,000,000 원 미만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30일 합산 1,000,000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후견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관련 규정(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의 행위를 그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각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p>[항소 취지]</p> <p>▶원고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

| | |
|----|--|
| | <p>부분을 취소한다.</p> <p>2.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내용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7. 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피고</p> <p>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
| 주문 | <p>[1심 주문]</p> <p>1. 피고는 원고들에게,</p> <p>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p> <p>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고,</p> <p>다. 피고가 이행기간 내에 위 가., 나.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하지 않은 행위별로 1일 100,000원을 지급하라.</p> <p>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8. 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p>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2심 주문]</p> <p>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p>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7.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p> |

| | |
|-------------|--|
| | <p>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p> <p>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p>[3심 주문]</p> <p>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p> <p>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p> |
| 번호 | 13 |
| 사건번호 | <p>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가합512794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등</p> <p>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p>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p>1.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애인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p> <p>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항소취지]</p> <p>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p> <p>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콜택 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p> <p>3. 피고들은 공동하여⁸⁶⁾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
| 주문 | <p>[1심 주문]</p> <p>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p>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

86) 원고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연대하여'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들의 이행의무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라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로 선택한다.

| | |
|--|---|
| |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2022. 3. 22.부터,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2022. 3. 29.부터 각 2023. 12.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번호 | 14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15.자 2018카합20049 결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신청취지 |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시한 E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무대미술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 주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E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무대미술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한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2018학년도 E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합격자 배제조건 중 “실기고사 성적 만점(300점)의 60%(180점) 미만인 자” 부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
|------|---|
| 번호 | 15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합105102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 |
| 청구취지 | <p>1. 피고 A, B는 각 원고 C에게, 피고 D는 원고 E, F에게, 피고 G, H, I는 각 원고 J, K에게 각 1,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p> <p>2. 피고 L은 피고 A, B, G, H, I, B의 장애인 모욕 발언을 중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라.</p> <p>가. 피고 L은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피고 A, D, C, G, H, I, B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징계) 및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하라.</p> <p>나. 피고 L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규칙 제200호)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p> |
| 주문 | <p>1.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p> <p>2. 원고들의 피고 A, D, G, H, I, B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p> |

| | |
|------|--|
| 번호 | 16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 |
| 청구취지 | <p>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4. 6. 15.부터, 원고 D, E, F에 대하여는 2014. 8.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p> <p>2. 피고는,</p> <p>가. 주위적으로, G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가이드북’이라 한다) 12면 ‘우주 전투기’ 항목의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는</p> |

| | |
|------|--|
| | <p>기재를 삭제하고,</p> <p>나. 예비적으로, 위 가.항 기재를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정하라.</p> <p>3.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p> |
| 주문 | <p>1.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3,000,000원, 원고 B, C,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4. 6. 15.부터, 원고 D, E, F에 대하여는 2014. 8. 24.부터 각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p> <p>2. 피고는 G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2면 ‘우주 전투기’ 항목의 “우주 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 중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부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으로 수정하라.</p> <p>3.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p> <p>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p> <p>5.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p>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
| 번호 | 17 |
| 사건번호 | <p>사례 ⑤ 웹 접근권 소송</p> <p>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p> |

| | |
|------------------------|--|
| <p>청구취지 및 항소취지</p>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내의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각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p>[항소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
| <p>주문</p>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 웹사이트(http://e△△△t.ssg.com) 내의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 |
|-------------|---|
| | <p>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2심 주문]</p> <p>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p> <p>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p> <p>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
| 번호 | 18 |
| 사건번호 | <p>사례 ⑥ 모두의 1층 소송</p> <p>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09024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자 2018가합524424</p>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p>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 B에게, 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을 원고 A, B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고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원고 A, B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포설비를 설치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점포설비를 설치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가.항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면서 20%의 비용을 부담하라.</p> <p>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p> <p>[항소취지]</p> <p>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p> <p>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p> |

| | |
|----|---|
| | <p>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p> <p>(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p> |
| 주문 | <p>[1심 주문]</p> <p>1. 피고 주식회사 D은,</p> <p>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 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각 설치하고, 2) 만약 1)항 기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편의점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편의점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하여 직원을 통해 편의점 밖에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p>나. 위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의 편의점 시설 접근·이용을 위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2)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의 영업표준에 따른 편의점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고, 3) 가맹점사업자들의 위 2)항 기재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하라. <p>2.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 중 원고A, B과 피고 주식회사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p> |

| | |
|--|--|
| | <p>은 원고들이 부담하여, 원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다.</p>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 |
|------|--|
| 번호 | 19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가합512794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등 |
| 청구취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
|------|--|
| 번호 | 20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3.자 2023카합21154 결정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
| 신청취지 | <p>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서울시설공단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2. 채무자 서울특별시시는 채무자 서울시설공단이 제1항을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하라. <p>라는 결정을 구합니다.</p> |
| 주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서울시설공단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 |

| | |
|----------------|---|
| | <p>2. 채무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시설공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서울시설공단이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특별시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p> |
| 번호 | 21 |
| 사건번호 | <p>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231918 판결 손해배상(기)</p> <p>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72966 판결</p> <p>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p>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p>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평택시장은 2017. 12. 31.까지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판결.</p> <p>[항소취지]</p> <p>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p> <p>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고지하라.</p> <p>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피고 관할구역에서 운행하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모든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승강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고지하라.</p> <p>4.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1, 2항 기재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p> |

| | |
|------|---|
| |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 주문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는 각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 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라. 3. 원고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평택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3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번호 | 22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1078 판결 손해배상(기) |
| 청구취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1) 피고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을 부여하고, |

| | |
|----|--|
| | 2) 2014. 7. 4. 부터 위 직책 부여시까지 월 3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며, 3) 31,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 부터 2015. 11. 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번호 | 23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1나11554 판결 장애인차별구제 및 위자료청구 등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25007 판결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들은 비대면 대출 진행시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전화통화를 이용 한 본인확인이 아닌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후 서면으로 추가 본인확인 을 진행하는 등의 대안적 절차로 본인확인을 하여 대부업 자와 청각 장애인들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p>[항소취지]</p> <p>▶원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이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비대면 대출 진행 시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전화통화를 이용 한 본인확인이 아닌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후 서면으로 추가 본인확인 을 진행하는 등의 대안적 절차로 본인확인을 하여 대부업자와 청각장 애인들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하라. |

| | |
|----|--|
| | <p>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 피고 주식회사 C</p> <p>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p> |
| 주문 | <p>[1심 주문]</p> <p>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2. 19. 부터, 피고 주식 회사 C는 2019. 10. 24. 부터 각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p> <p>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2심 주문]</p> <p>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각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p> <p>2. 항소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p> |

| | |
|----------------|---|
| 번호 | 24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1나1338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9257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p>[청구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p>[항소취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1. 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문 | <p>[1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 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p>[2심 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부록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 인권 조약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제61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발효되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14년만인 2022년 12월에 비준되어 협약 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록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효일 2008.5.3] [다자조약, 제1928호, 2009.1.9]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 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 며.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 쳐.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제4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 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할 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

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

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

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 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

- 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다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

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 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 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의 관리, 보건의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한다.
 -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조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

려하고 증진할 것

-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

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

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

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발행인 회장 김 정 욱

발행일 2024. 6.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